

교육복지국인가 교육유토피아인가

박 거 용

대학교육개혁 공대위 집행위원, 상명여대 영어교육과 교수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위)는 지난 5월 31일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언론은 이를 대서특필하면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교육혁명이라고 극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대학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수들은 그것이 여러 전향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사실 우리는 현 정부가 출범시부터 교육개혁을 기치로 내건 만큼 획기적인 개혁안이 나오기를 기대하였다.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성되는 데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정부가 개혁안의 발표를 3개월여 늦추는 것을 참을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사회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교육개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에 진정한 교육개혁을 바라는 우리 전국

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는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의 교육개혁안을 평가하고 견해를 밝히며, 앞으로 명실상부한 교육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분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을 GNP의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선언만이 있고 그 구체적인 재정책보책에 대하여 명확한 언급이 없다.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재정적 지원이 불가피함에도 그에 대해 정부 부처간에 아직 아무런 합의가 없음은 과연 현 정권에게 교육개혁을 제대로 실시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둘째, 따라서 이 교육개혁안을 관통하고 있는 시장주의적 교육관은 정부가 교육재정의 부담을 방기한 당연한 결과이다. 우리는 경쟁과

자율, 다양성과 특성화를 진작시킨다는 신교육체제가 일정한 합리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교육은 단순히 시장의 논리로서만 평가하기 어려운 형평성과 공공성을 지닌다. 적어도 중학교과정까지 행해져야 할 의무교육은 국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며, 그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자립형 사립고교'나 '준칙주의'를 제시함은 사실상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사부문에 전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학벌 위주의 사회구조가 온존한 파행적 교육여건 아래에서 자립형 사립고교는 귀족 명문고가 될 것이고 명문사립대학들은 자율화 정책에 힘을 얻어 등록금을 엄청나게 올리면서 대학입학제도 속에 기부금입학제를 포함시킬 것이다. 이는 계층간의 교육적 위화감을 심화시키면서 기존의 계층구조를 화석화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이번 안은 규제·통제 중심 학교운영에서 탈규제·자율·책무 중심 학교운영을 강조한다. 그러나 대학설립기준령이 엄존하고, 정량분석 중심이며 객관성이 결여된 대학순위 매기기 위주의 대학종합평가인정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에 버금갈 권한과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평가원(가칭)을 신설하는 것은 탈규제라는 미명 아래 교육에 대한 통제를 내재화하는 거대한 공룡을 만들어 낼 위험이 크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 관련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실망을 느끼는 부분은 정부의 개혁안이 대학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핵심적인 사항들을 모두 회피하였다는 점이다. 그간 우리는 학사·재정·인사·징계 등 모든 대학운영의 민주화와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위하여 교수협의회의 공식적 의사결정기구화가 긴요한 과제임을 주장해 왔다. 우리는 총·학장 직선제를 주장하여 왔으며, 또 그에 따른 사립학교법 및 교육관계법의 민주적 개정의 필요성을 요구해 왔다.

또한 우리는 대학교육의 50% 이상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학문적 후속세대인 시

간강사에게 교원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강사료를 현실적으로 책정하여 월급제로 할 수 있는 시간강사 특별법 제정도 건의하여 왔다. 게다가 우리는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으로서 교육부를 포함한 교육계의 비리와 부조리를 철저히 척결하여야 하며, 교육현장의 부정 비리에 항거하고 교육민주화를 이루고자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재임용제도 등의 악법에 의해 교육현장에서 쫓겨난 해직교수와 교사를 원상복귀 시킬 것을 누차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는 이 모든 사항들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진정한 개혁안이 아니고 개편안이거나 수정안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본고사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대학입학제도 개혁안에 원칙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개혁안에 따르면 대학입학은 종합생활기록부, 수능시험, 논술시험, 면접, 실기전형 자료들을 선택자료로 하고 복수지원을 가능케 하는 범위 안에서 각 대학이 전형방법(전형자료별 반영방법, 가중치 부여 등)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대학의 자율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내신제를 폐지하고 '종합생활기록부'로 대체하여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민주적 공개적인 방식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한다. 물론 종합생활기록부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와 교사의 의식개혁 및 처우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학입학제도와 직접 관련된 '종합생활기록부'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제의 기본정신인 주민통제원칙에 의거해서 운영되지 않는 한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 중심의 운영체제를 환골탈태하고 실질적인 심의·의결기구가 되지 않는 한, 학교공동체 구축과 이를 통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이라는 정부의 개혁안은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 정책에 대해

서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사학 재단의 독자적이고 파행적인 운영권만을 확대·보장할 가능성이 큰 정부의 정책은 재정 지원 없이 정원자율화를 통한 대학별 재정 확보와 그에 따른 대학간 무한 경쟁만을 부추기면서 대학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세계화의 구호 아래 시장의 논리를 대학에서도 관철 시키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학자 및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사회 각 분야의 관리자를 양성하는 대학, 특정 분야 및 예술교육에 치중하는 대학, 산업현장에 종사할 기술자를 양성하는 대학, 다전공·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한 대학 등 5개의 모형에 따라 대학을 특성화하려는 정책도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치지 않아 취지와는 달리 대학의 자율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정부가 제시한 대학설립과 관련한 준칙주의는 사학의 무분별한 난립을 초래하여 대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교육개혁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다음의 사항이 후반기 교개위의 중심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개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따르는 교육재정의 규모를 밝히고 충분하고도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재정적 뒷받침이 없는 개혁 주장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해야만 초·중등학교는 물론 대학의 교육개혁이 실현될 수 있다. 재정확보를 위해서 교육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기업에게 일정 비율의 교육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사립학교법 등 교육법이 민주적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학의 교수협의회가 공식 의사결정기구가 되어야 하고, 총·학장의 직선제가 보

장되어야 한다. 특히 교개위는 사립학교 이사회의 공개적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이사회 규정을 90년 3월의 사립학교법 개정안보다 진일보한 상태로 개정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다 해직된 교수들의 원상복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학문후속세대인 시간강사의 신분보장과 연구조건 조성을 위한 대학강사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교육은 현대 사회가 지식·정보사회로 전환하는 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국가적인 공공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제화·개방화·세계화 구호가 표방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도 결국 파행적인 교육정책을 정상화하고 학력중심의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가능해질 것이다. 교육현장과 대학사회의 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문제, 즉 학력 위주의 사회구조를 탈구조화하는 일과 함께 이루어져야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사회의 민주화와 교육의 민주화이다. 정부가 교육개혁을 통해 강조해야 할 것은 대학간 민주화 경쟁을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다. 교육현장과 교육사회의 민주화를 제1과제로 삼지 않는 정부와 교개위의 '열린 교육 사회', '교육복지국가'(EDU-TOPIA)를 위한 교육개혁안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교육유토피아'(ED-UTOPIA)를 찾아 헤매는 환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이 글은 필자가 '대학교육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5·31 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성명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박거용/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는 상명여대 영어교육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민교협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대학교육개혁 공대위 집행위원 및 『문화과학』 편집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역서로 『러시아 형식주의』, 『미국 문학사상의 배경』 등이 있고, "나사니엘 웨스트 소설 연구"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